



제주4·3 책임 규명을 위한 심포지엄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 일시 | 2018년 11월 6일(화) 14:00 ~
- 장소 | 아스타호텔 3층 코스모스연회장
(제주시 서사로 129, 삼도1동)
- 주최 | 제주4·3희생자유족회
- 주관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해결을 위한 국제연대포럼

Contents

- **진행순서** 5

- **개회사** 7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대행 오임종

- **축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 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이석문 9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 10

- **기조강연** 11
 “20세기 냉전체제와 미국
 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 강우일 주교

- **종합토론**
 <주제발표문1> 25
 “제주4·3과 미국 - 학살의 책임을 기억하기”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주제발표문2> 45
 “피해자 중심의 진실 규명 및 인권·평화 증진운동의 과정과 의미”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토론문>
 제주다크투어 공동대표 백가윤 63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양성주 69

Program

■ 1부 ■ 개회식 (14:00 ~ 14:20)

- 국민의례
- 개회사
- 축 사

■ 2부 ■ 기조강연 (14:20 ~ 15:20)

- “20세기 냉전체제와 미국”
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 - 강우일 주교

■ 3부 ■ 토론회 (15:30 ~ 17:00)

- 좌장 김종민(前 4·3위원회 전문위원)
- 주제발표1 “제주4·3과 미국 - 학살의 책임을 기억하기”
양정심(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 주제발표2 “피해자 중심의 진실 규명 및 인권·평화
증진운동의 과정과 의미”
정구도(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종합토론 백가윤(제주다크투어 공동대표)
양성주(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 4부 ■ 폐회/만찬 (17:00 ~)



개회사



제주4·3희생자
유족회 회장대행

오 임 중

우리는 며칠 전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UN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미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109,996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를 미국측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주4·3의 해결 과정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토론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제주4·3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제기되고 그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책임을 규명해내고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들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쾌하게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주4·3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통치하던 대혼란기에 한반도의 완전통일과 민족해방을 외치며 일어난 자주적, 자립적 민족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까지도 미국은 남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며 이승만 정부의 폭정을 묵인, 방조하였고 암암리에 반인권적 만행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제주는 돌이킬 수 없는 대학살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책임은 결코 감춰질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미국의 원죄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제주4·3을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숙명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강우일 주교님을 비롯하여 토론회를 위하여 먼길을 해주신 정구도 이사장님, 김종민 선생님, 양정심 실장님, 백가윤 대표님, 양성주 사무처장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4·3해결에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유족님들과 4·3관련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소중하고 의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 태 석

존경하는 4·3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입니다.
 만추가 되면서 산야가 제 빛깔과 제 향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제주4·3도 완전해결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인 제주4·3 책임규명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임종 회장대행님과 4·3유족회, 제주4·3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포럼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4·3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가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이라고 정부책임을 인정했고,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4·3위령제에 참석하여 국가폭력으로 고통 받은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닐 것입니다.
 제주4·3은 당시 미군정하에서 발생한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이나 주제발표도 미군정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제주4·3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UN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을 마치고 서명지를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책임규명을 위한 연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연구 작업을 기초로 해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혀낼 때 제주4·3은 완전해결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좋은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이석문

제주4·3책임규명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소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오임종 4·3유족회 상임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유족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제주4·3해결을 위한 국제연대포럼'에도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세기 냉전체제와 미국'을 주제로 기조강연하실 강우일 주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올해 3월 제주교육청에서 4·3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4·3희생자들은 인간의 존엄함과 평등, 생명의 가치를 더 빛내고 드러내기 위해 한 발자국을 더 크게 내딛는 순교적 행렬의 일원"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당부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나라'를 향해 충실히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4·3에 대한 책임 규명은 4·3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희망의 빛이 감돌 것입니다. 4·3 70년인 올해, 평화의 따뜻함이 이전보다 두터워졌지만 4·3본질의 정립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책임 규명'의 소명은 한 세대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 세대로 변함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4·3의 본질을 기억하며 '책임 규명'의 소명을 이어가도록, '평화인권교육'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포지엄 개최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 조 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관하는 ‘제주4·3 책임규명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엄에서 다루는 주제가 미국의 책임에 대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4·3유족회는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미국의 책임을 묻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미국의 책임규명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토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재단도 이 문제를 비켜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43 영문자료집을 펴냈고, 곧이어 영문사이트 개설, 영문 논문집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13일 예정된 재단 주최 평화포럼 주제도 미국의 책임문제로 설정해서 국내외 학자들이 이 문제를 집중 토론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UN에서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미국 내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여론 환기에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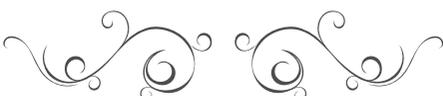
유족회와 재단 그리고 관련단체 및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파고들면 진상규명의 남은 과제 중 하나인 미국의 책임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4·3이 분단과 냉전이 빚어낸 세계사적인 사건이란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세계화에도 뚜렷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요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기조강연을 해주시는 강우일 주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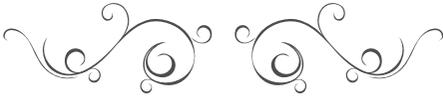
끝으로 심포지엄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대행님을 비롯한 유족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강연





제주4·3 책임 규명을 위한 심포지엄

“4·3의 통합적 의미를 찾아서”

강우일 주교 (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

1. 4·3 발생의 역사적 구도

1.1 4·3의 의미를 찾아서

한국 현대사에서 4·3은 1948년 발생 이후 오랫동안 암흑과 침묵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러나 4·3의 고통과 상처를 50년 넘게 끌어안고 묵묵히 견디어온 수많은 제주도민의 한과 염원에서 썩이 돌아, 2000년 1월12일 4·3 특별법이 공포되고 그 이후 4·3에 관한 많은 연구와 성찰, 작업이 뒤따랐다. 2003년 10월15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주 4·3 진상보고서’는 「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무장봉기가 발단이 됐다. 단, 강경진압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다수의 양민이 희생됐다」고 4,3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4·3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많은 자료에는 주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이념과 무관한 일반 시민, 농어민, 어린이, 노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합법적인 조사와 재판의 과정 없이 연행, 고문, 즉결처분, 집단학살을 자행하였다.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가 공권력과 우익청년단체회원들에 의한 폭력이 제주도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족 내부의 부끄러운 참극이고, 국가의 반인륜적인 범죄임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4·3의 한 가지 단면이고,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배경과 요인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의 밑바닥에 흐르는 도도한 가치와 의미의 진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70주년을 맞이한 제주 4·3을 성찰하며, 4·3을 단순히 한국 현대사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비극적 사건으로 보고,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고 사회적 책임 규명을 하는데 그치는 것으로는 4·3을 제대로 소화하는데 부족하다고 본다. 이제는 4·3 안에서 오랜 민족의 삶의 궤적 속에 숨겨진 더 깊은 내면적 가치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1.2 4·3이전의 역사적 배경

1945년 8월로 세계2차대전에서 일본제국주의는 패배하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하였다. 그 결과 일본제국이 36년간 식민지로 강점하던 한반도가 38도선을 놓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미국군대와 소련군대의 양대 세력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한반도는 고대에서부터 일제에 강점당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 임금과 부모에 대한 충성을 국가 최고의 이념으로 삼던 왕정체제하에서 살아왔다. 왕이 국가 전반에 걸쳐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정체제 하에서 왕을 둘러싼 소수의 지배계층 엘리트들이 수직적인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온 국민을 통치하고,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오로지 신하로서의 무조건적인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당한 채,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천한 신분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들, 학문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은 평생 천민 계층으로 고정되어, 인간의 고귀한 인격적 권리와 품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백성은 세상은 그런 것이라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가슴에 한만 품은 채 운명을 수용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런 전제군주시대에도 18,19세기 들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민중들의 봉기가 속속 일어난 것을 보면, 많은 국민이 인간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존감이 갈수록 고조되어 더 이상 전제 군주들의 일방적 독재를 용납하지 못하는 의식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층에서도 모든 백성이 신분이나 가문, 교육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은 여망이 싹트고 있었다. 18세기 조선의 젊은 학자들이 천주학에 매료되기 시

작한 것도 그러한 사회적 열망의 발로였다.

19세기 조선왕조의 실정과 관료들의 부패는 국내적으로는 전국에서 경제 위기와 농민봉기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민중의 봉기는 지배계층에 대한 불신과 단계적인 사회질서의 붕괴로 이어졌다. 국제적으로는 서구 제국주의의 확산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의 조선에 대한 개항 압박과 내정 간섭을 불러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중국과 일본은 조선을 자국 세력 확대의 첫째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까지 파견했다. 조선 왕조체제의 이러한 무질서와 권력 공백 상태에 19세기 말 조선의 농민과 민중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동학농민혁명이란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 정권의 위기에 직면한 조선 조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군과 일본군을 차례로 끌어들였고,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에까지 이르렀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일본군은 한 세대 앞선 신무기를 동원하여 동학농민혁명군을 철저히 분쇄하고 무력화하며, 청일전쟁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개입을 차단하고 1910년 조선을 합병하였다. 일본제국은 세계2차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36년간 조선을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고 통치하였으나, 조선의 민중들은 1919년 3.1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염원을 불태우며 일본제국에 대한 저항운동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화해 나갔고, 상해에 대한민국 망명 정부도 수립되었다.

일제강점기 36년은 첫째로는 한민족이 나라를 외국 세력에 내어준 조선왕조와 결별하는 시대였다. 한민족은 이 기간 중 일제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마음대로 재단하던 전제군주체제에서 해방되는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종료되고 해방이 되었어도, 조선왕조를 복원하려는 염원이나 욕구가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로 이 36년은 조선왕조의 뒤를 이어 조선을 장악하고 수탈과 강압으로 한반도를 식민통치한 일본제국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고, 새로운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을 싹트게 하는 발아기였다.

조선의 일제강점기는 국제적으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사상과 민족자결주의 사상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부각되는 시대와 일치하였다. 일본제국주의의 먹잇감이 되어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기며 살아가던 조선의 지식층과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민중에게 러시아 제국의 제왕과 귀족 정권에 저항하여 제국을 붕괴시킨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은 새로운 시대의 희망으로 다가왔다.

1919년 1월21일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승하는 조선 국민의 일제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고조시켰고, 3월1일 전국 도처에서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외치는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2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한 대규모의 거국적 시위였으나 일제의 무차별 무력 진압과 검거 작전으로 평화적인 3.1운동은 좌초했다.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이 사망하고 4만5천 명이 부상, 4만9천 명이 검거되니, 일제를 향한 비폭력 만세 운동은 더 이상 지속할 동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조선의 지식인들은 3.1 운동의 실패를 반성하는 가운데, 먼 타국이지만 민중의 봉기로 성취된 러시아 혁명의 성공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추구하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는 일제에 대한 투쟁을 조직화하고 새로운 민족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론과 수단으로 등장했다.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조선의 초기 사회주의자들 가운데는 3.1운동에 참가한 이들과 그로 인해 옥고를 치른 이들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하기 이전에 3.1 운동을 정점으로 하는 1910년대의 민족운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참조: 논문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의 진화와 발전’,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이준식 저) 초기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 운동의 한 분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에 사회주의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일본제국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민족 운동의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10년대부터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다가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된 사회주의자들에게 운동의 일차적인 과제는 민족해방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이념적 방편이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위 논문 9쪽)

1.3 4·3을 야기한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

일본제국의 세계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에 살던 많은 조선인들이 짧은 기간 안에 대거 한반도로 귀향했다. 해방이후 1945년부터 1947년 사이에 일본에서 제주도로 귀향한 교민이 7만 명에 달했다. 일본에서 귀향한 제주도민들 중에는 이미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수탈 정책에 의해 토지를 잃거나 생활기반을 상실한 농민들이 일본 노동 시장으로 집단적으로 이주, 정착한 경우가 많았다. 1920년대부터 일본 제일의 공업도시였던 오오사카 지역에는 고무 공업이 전성기를 맞았고, 일본인들이 꺼려하는 고무공장에 저임금노동자로 제주도민들이 많이 취업하였다.

1925년에는 제주와 오오사카를 연결하는 정기 여객선 항로가 열려 많은 노동 이민 행렬이 이어졌고, 한 때는 제주도민의 4분의 1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다. 후쿠오카 탄광 지역에 광부로 취업한 제주인들도 적지 않았다. 저임금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던 이들은 자연히 노동현장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불공정에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고, 노동 운동을 시작하며 사회주의 이론도 접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인으로서 일상생활 안에서 자주 일본 사회의 민족적 차별을 경험한 이들은 조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일본 제국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과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는 열망을 키워나갔다.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조국으로 돌아온 제주 출신 교민들은 한반도에서 계속 살았던 이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의식과 조국 국권 회복에 대한 큰 소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귀국 후 실제로 제주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조국 건설에 대한 부푼 희망을 안고 일본에서 귀향한 제주출신 교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미군정의 정책 부재와 실책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뿐이었다. 1944년과 1946년의 제주도 인구 변동을 비교하면, 21만9,500여 명에서 27만6,100여 명으로 5만 6,600여 명의 인구가 제주도에 단기간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귀국한 이들이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인구팽창에 전국적으로 이어진 농사의 대흉년은 제주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었다. 1946년 제주도의 보리 수확량은 8만 3,785석으로, 1944년의 26만8,133석에 비하면 31%에 지나지 않았다. 제주도의 식량난이 가중된 것은 전국적인 대흉년으로 다른 지방에서 쌀을 도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밖에도 일본 자본의 철수로 인한 제조업체의 가동 중단, 해방으로 인한 갑작스런 대외 교역의 중단, 미군정의 미곡 정책 실패 등으로 빈사 상태에 들어간 제주 지역의 경제 상황은 제주도민들을 심리적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제주로 돌아온 귀향 교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또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모순적 현실은 미군정이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관현으로 동포를 압박하고 수탈하는데 앞장섰던 조선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인 경찰들을 미군정의 경찰력과 행정요원으로 다시 등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시민들의 미군정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제주도 전체의 총체적 위기 상황은 1947년 3월1일 제주시민 3만여 명이 참가한 3.1절 기념대회에서 폭발하였다. 이 집회는 제주 역사상 가장 많은 군중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다. 평화적으로 시작된 기념대회는 경찰의 압박과 우발적 충돌로 시위로 바뀌었고, 경찰은 시민을 향해 발포, 어린이를 포함하여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항의로 제주도민 전체가 한데 뭉쳐 제주도 전역에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제주도의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대부분인 23개 기관, 105개의 학교, 우체국, 전기회사 등 제주 직장인 95%에 달하는 4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심지어 제주 경찰의 20%도 파업에 참여하였다. 미군정은 총파업에 대하여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3.1절 시위에 이어진 총파업 책임자 색출과 대량 검거는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켰고, 1948년 4월3일에는 좌익 무장대의 경찰지서 습격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미군정은 제주도를 친 공산주의 지역으로 단정하며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에서 군대를 동원한 토벌로 방향을 바꾸었다. 진압이란 강압적으로 진정시키는 행위이지만, 토벌이란 무력으로 쳐 없애는 것으로 살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미군정의 기본정책은 무차별 검거와 학살을 불러왔고, 민간인 희생자 수가 급증하였다.

1948년 8월15일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제주도와 관련된 미군정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1948년 11월17일 제주도에 한하여 계엄령을 선포하며, 대규모 군사력과 우익단체 회원들을 파견하고 초토화 작전, 제노사이드에 준하는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섬인구의 10%가 넘는 도민들이 무차별 학살되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 관료와 군인들에게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감보다 이질감이 큰 섬나라였고, 섬멸하고 제거해도 좋은 적진이었다.

정부는 여수 순천 지역에 주둔해 있던 14연대에 제주 토벌을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4연대 40여 명의 군사들은 자국민을 토벌하라는 무도한 명령에 대해 불복하며 무장투쟁을 벌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여순반란 사건’으로 불려왔지만,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전에 조직, 계획, 준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돌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부를 전복할 의도였다면 좀 더 치밀한 사전과 사후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런 흔적이 없었다. 그들은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제주토벌출동거부

병사위원회’라는 명칭을 걸고 봉기하였다. 제주토벌이란 동포의 학살을 의미하였기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쫓겨 이유였다. 봉기 시작에 불과 2명의 초급 장교와 40여명의 병사들이 움직였는데 나중에 2천여 명 가까운 병력이 합세한 것은 자국민을 토벌하라는 명령이 부당하다는 그들의 명분이 충분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당시 14연대 박승훈 연대장이 기자회견에서 ‘병사 중 대부분은 제주도에 가는 것을 희망치 않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주철희 저, 흐름 출판사 88쪽)

1.4. 4·3의 사회적 의미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4·3을 통하여 무엇을 읽어야 할까?

조선왕조 시대에서 이 땅의 백성들은 이미 전제군주체제와 부조리한 신분제도에 의한 억압과 차별에 끊임없이 짓눌리고 고통당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과 평등에 대한 시야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민중은 조선왕조의 뒤를 이은 일본제국주의의 부당한 침략과 수탈과 차별에 대한 저항에 동참하며 국가 권력이라고 해도 불의와 폭력에는 불복종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정의롭고 고귀한 가치임을 학습해 나갔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하여 장악한 미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외세로 비추어졌다.

높은 항일 의식과 새 조국 건설의 여망을 안고 일본에서 돌아온 귀향민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제주 지역에서 주민들은 미군이라는 새로운 외세의 등장 에 새 시대를 향한 희망보다는 일제의 연장이라는 의심과 배신감을 맛보았다. 일제강점기의 경찰이 미군정 경찰로 변신하고 있었고, 미군정의 실정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극도의 생활고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유엔의 남한 단독선거 결정은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민족의 해방, 사람다운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위기감을 조성하게 되어 조직적인 투표 불참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를 일으킨 제주도 남로당 세력의 목표는 남한 단독 선거의 반대와 저지였다. 이들은 5월10일 도민의 총선거의 투표 불참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투표소를 공격하거나 주민들을 강요하여 투표를 저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남로당 중앙의 정책이나 지시와 무관하게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결행한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것이였다. 선거 반대와 방해를 주도했던 세력은 제주도 남로당 당원들이었으나, 도민의 상당수가 투표를 꼭 해야 된다는 의식이 부족했다. 전국 200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북제주군만 과반수 미달 투표로 무효처리 되었다. [북제주군 갑구(투표율 43%), 북제주군 을구(투표율 46.5%)] 그러나 미군정은 이러한 움직임이 제주도 밖에서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조종이라고 보고 군함을 출동시켜 북부 해안을 봉쇄하고 좌익 세력 소탕을 지시하였고, 8월15일 수립된 이승만 정부는 무차별 섬멸 작전에 나섰다.

1948년 4월3일의 무장 봉기는 분명 몇 백 명 수준의 혈기왕성한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결행한 사건이었으나, 그 배경과 과정에는 제주도민 전체, 한국인 전체가 기다리고 염원했던 민족의 독립과 해방, 사회 구조악과 불의에 대한 저항,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자유와 권리를 향한 장구한 역사의 동력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성서 전승에 드러난 인간 구원의 역사

성서적 전승은 인간의 역사 속에 작용하신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서술한다. 인간이 처한 가장 불행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가장 절실하게 염원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그 구원을 체험한 것은 에집트 제국에서 종살이하며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야곱의 후손을 비롯한 노예들의 집단이었다. 야곱의 후손들은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에집트로 이주한 노동이민들이었고, 온전한 시민 대접을 받지 못했다. 노예 계층은 인간으로 존중 받지 못하고 상품으로 매매될 수 있는 재산이었다. 고대 제국들의 경제와 번영을 떠받치고 있던 원동력은 노예 집단의 노동이었다. 에집트 제국은 거대한 신전과 피라미드와 건축물들을 짓는데 수십만 명의 노예들을 동원하곤 했다.

탈출기는 억압당하는 이 노예들의 고통에 대해 전한다.

“나는 에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에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 내어라.”(탈출. 3,7-10)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은 모세의 인도로 그 제국에서 탈출하였다. 탈출은 오랜 인내와 희생의 여정이었다. 소수 개인이 아닌 집단의 탈출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의 여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탈출을 주도한 모세 자신부터 왕자의 신분에서 반역자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추락을 경험하며 많은 고통과 시련의 여정을 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안정된 에집트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옮아가는 도중 끊임없는 외부 세력의 도전과 내부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이끌어내시려는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의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노예들,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시려는 하느님께 신뢰와 믿음을 두었기에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

성서를 관통하는 이러한 자비와 구원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에집트 탈출 이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다시 상기하고 복습하고 되돌아가는 신앙의 출발점이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련과 고통을 살아내면서 보잘것없는 작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빛나는 모상과 영광을 발견해 나갔다. 고난의 역사는 인간 안에 하느님의 존엄과 위엄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3. 4·3에 감추어진 인간의 존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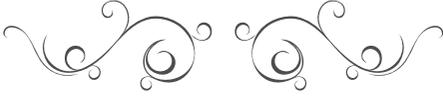
4·3은 한국 현대사에 보기 드문 참극을 연출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민간인이 무참히 학살되는 반인륜적 범죄가 국가 조직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많은 이들은 이를 해방정국의 이념적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이념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 휘말려 희생된 우발적 사고로 인식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4·3은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민족의 해방,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악과 불의로부터의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도도한 역사의 에너지가 힘차게 분출되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적 동력을 멈추고 저지하려는 부정적인 역류현상으로 인하여 그토록 많은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것이었다.

4·3은 조선왕조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냉전시대에까지 흐르는 고귀한 역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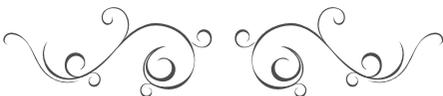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물줄기의 연장이다. 인간의 존엄한 인격과 자유와 평등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 수많은 희생자들의 순교적 행렬의 연장이다. 4·3에서 사라진 수많은 무명의 희생자들이 비록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하였어도 자신들의 무의미한 것 같았던 고통과 죽음 안에서 이 세상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 생명의 가치를 빛내는 순교적 여정을 걷고 있었다. 반세기 이상을 어둠에 묻히고 침묵 속에 매장된 억울한 희생을 통하여 자신들 안에 감추어졌던 하느님 닮은 존엄과 영광을 이제 70주년을 맞이하여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4·3의 영령들은 이 땅의 인간해방을 위하여 자신들을 아낌없이 봉헌한 하늘나라의 역군들이요 제물이었다.



종합토론





[주제발표문 1]

제주4·3과 미국

- 학살의 책임을 기억하기 -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1. 들어가며

해방이 왔다. 그 날이 왔다. 심훈의 시처럼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 날”이 드디어 왔다.

1945년 8월 16일 아침부터 건국준비위원회(건준) 본부가 있는 계동을 향하여 청년, 학생,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5천여 군중은 휘문중학교 운동장에 모여들어 건준 위원장 여운형의 연설을 들으며 독립을 환호했다. 흰 색 양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여운형은 사자후를 토했다. 전설적인 독립투사 여운형도, 평범한 조선인들도 해방의 감격과 다가올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무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해방 조선’의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고 한반도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 중장과 24군단의 미군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했고, 9월 9일 일본과 항복조인식을 가졌다. 9월 9일 오후 4시를 기해 남한 지역에서 일본 국기의 게양이 금지되어 오후 4시 30분 총독부 정문 앞에 달렸던 일장기가 강하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태극기가 아니라, 성조기였다. 38선을 경계로 진주한 두 개의 외부세력과 욕망의 대리자 간의 결탁은 분단을 불러일으켰다.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은 벼락처럼 왔다가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 갔고, 그것은 한반도 끝자락인 제주도 마찬가지였다.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 새벽 한라산과 주위의 오름에서 일제히 봉화가 오르면서 진행되었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해방 3년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공간은 평범한 사람들도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는 열망에 휩싸이고 한편으로는 생활을 이어가는 일상과 정치가 결합된 나날들이었다. 해방 직후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제주도민의 바람이 해방 3년사에 녹아있다. 그리고 그를 가로막는 벽들도,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제주도민의 저항도, 그리고 좌절도 그 시간에 있었다.

제주 4·3이 발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1947년 경찰이 제주도민에게 발포한 사건인 ‘3·1 사건’ 이후 계속된 미군정과 우익,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위적인 성격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투쟁이었다. 1948년 5·10단독선거 저지 투쟁은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4·3은 그 가운데 가장 조직적인 투쟁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희생자 수는 현재 14,233명이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만 만 명이 넘는 것이다.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4·3당시 인명피해를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80%에 가까운 희생자가 군경토벌대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희생자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봉기 주도 세력인 산사람들의 봉기와 군인과 경찰들의 토벌 사이에서 제주도민 10분의 1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되었다. 그 당시 죽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민간인이었지만, 빨갱이로 불려졌고 제주는 붉은 섬이었다. 반공정권은 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했다. 그 후 40여 년에 걸친 침묵과 금기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처럼 극심한 인명 피해가 일어난 원인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주도로 이루어진 군경토벌대의 강경진압작전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4·3이 일어나자마자 국방경비대, 경찰, 우익청년단을 동원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미군정과 군경토벌대는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으로 인식하면서 토벌작전에 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실시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수많은 제주도민이 학살당했다.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 미국은 군사고문단을 통해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진압작전을 지시하고 방조했다.

학살의 책임은 미군정으로 대변되는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었지만, 미국의 책임 문제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못했다. 정부의 책임문제는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4·3을 규정함으로써 일단락을 짓고 있다. 최근 70주년을 전후해서 미국의 책임과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냉전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그 속에서 4·3의 참혹한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운동과 같이하고자 하는 역사적 규명에 대한 소고라 할 수 있다.

2. 4·3의 발발과 미군정의 대응

1948년 4월 3일 새벽 한라산과 인근 오름에서 봉화가 오르면서 무장대의 봉기가 시작되었다. 봉기세력의 내세운 기치 중 하나는 5월 10일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독립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5월 10일의 국회의원선거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반대투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전국적인 단선반대투쟁 속에서 미군정은 보다 많은 유권자를 선거에 참여시켜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선거를 치러내야 했다. 이에 1948년 3월 3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한국인들에게 선거의 의의를 강조해 투표는 성년에 달한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며 투표를 포기하는 자는 불참한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을 비판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4월 2일에는 산하 지휘관들에게 전문을 보내 공산주의자들과 기타 선거반대세력에 의한 선거 방해 시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전문은 5·10선거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다가오는 한국의 선거는 우리의 점령기간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공정선거를 통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이번 노력이 성공하는 것은 미합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중국 사절단의 성과에 기본적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 소수 반대정당, 후보선출 희망이 없는 단체들의 상당한 반대가 예견된다. 오늘까지의 사건에 근거해 선거 수행과 관련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상당한 반대도 예견된다.

군정장관은 미국의 선거감시 집행에 책임이 있다. 이런 목적으로 군정장관과 그의 대표들은 민간인과 감시자로서 활동하기 위한 인력과 교통수단을 포함해 필요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어떤 군부대라도 직접 연락할 것을 승인 받았다. …… 순찰은 선거 당일 일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각각의 지역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영되지만 당일에는 질서 회복에 필요하지 않는 한 군복을 입은 미군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¹⁾

이와 같이 미군정은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5·10선거의 성공적인 실시가 우선시되어야 했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미군정의 의무였다. 미군정은 선거법 개정, 선거위원회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선거 실시를 위한 행정·법률적 조치를 진행시켰다.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정부 서무처를 선거관리 책임부서로 정하고, 선거업무 관련 군정장관의 대리인으로 존 웨커링(John Weckering) 준장을 임명했다.²⁾ 이와 함께 경찰력을 선거체제로 전환해 선거반대세력의 물리적인 선거저지투쟁에 대응했다. 하지 중장은 현재의 남한의 실제 상황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요소로서 경찰력을 강화시키는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간주했다.

5·10단선 저지투쟁을 목표로 내세운 4·3이 일어나자, 미군정은 제주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찰과 경비대 병력을 준비했다. 미군정은 4월 5일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통행증제를 실시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유엔조선임시위원단(UNTCOK) 사무국 차장 밀너(I. Milner)가 4월 7일 제주도의 치안상황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4월 9일로 예정된 위원단의 제주도

1) 「주한미육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정청이 남한 선거와 관련해 공포한 명령들〈주한미육군고문관실 1948년 4월 9일자 급송문서 제85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9, 171쪽.

2) 『조선일보』, 1948년 3월 14일.

방문을 우려하자, 미 연락장교 웨커링(John Weckerling) 준장은 4월 8일 그를 만났다. 웨커링은 “경찰 증원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경비대도 여전히 예비부대로 주둔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밝혀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이 예정대로 감시활동에 나서게 했다.³⁾ 4월 10일 미군정은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을 2차 응원대로 파견했다. 그리고 경비대 제9연대의 특별부대가 제주읍과 서귀포에 출동해 경찰과 함께 경비치안에 들어갔다

미군정은 겉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단독선거 저지를 목적으로 일어난 4·3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사건이었다. 이에 미군정은 선거감시활동을 벌이는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을 안심시키는 한편 다른 한 쪽에서는 제주도에서의 성공적인 선거 실시를 위한 강경 진압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4월 초·중순 무장대의 공세에 이어 4월 말에 이르러 경찰과 미군정의 강력한 토벌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미 군정장관 던 소장은 해안경비대와 국방경비대에 제주도 작전명령을 내렸다. 합동작전은 해안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경비대 1개 대대를 4월 20일 까지 제주도에 파견해 전투를 준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비대에는 기관총과 카빈, 탄약을 보급했다. 이어서 4월 18일 “L-5 비행기 두 대와 한국경비대 1개 대대를 파견하고 매일 매일의 상황보고를 무선으로 보고할 것” 등 토벌작전을 같이 병행해서 지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던은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기에 앞서 불법집단 지도부와 접촉하고 항복할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무공작을 병행하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⁴⁾ 이는 1948년 4월 28일에 열렸던 국방경비대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인민유격대장 김달삼과의 회담인 소위 ‘4·28평화회담’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당시 주한미군 작전참모부 슈(Schewe) 중령이 작성하여 작전참모 타이센(Tychsen) 대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4·28평화회담의 실체와 제주도 사태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을 보여준다.⁵⁾ 슈 중령의 보고서는 4월 27일과 4월 28일의 작전 결과 보고와 4월

3)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5·10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70쪽.

4) 1948년 4월 18일에 던 군정장관이 제주도 제59군정중대장에게 보낸 작전지시문이다. NARA, RG 338, Entry.11070, Box. No. 84.

5)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 do Island」, NARA, RG 338, Entry.11070, Box. No. 68.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29일~5월 1일의 작전 계획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군정은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횡포와 유격대의 조직과 공격 수위 등 당시의 제주도 상황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슈 보고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제주도 상황에 대한 평가보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미군정의 의도와 역할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소속 슈 중령은 타이쎈 대령의 지시에 따라 1948년 4월 27일 제주도에 가서 59군정중대의 맨스필드 중령, 20연대장 브라운 대령, 게이스트(Geist) 소령, 그리고 한국5연대 고문관 드루스(De Reus) 대위 등과 협의하고 게릴라 토벌작전을 벌였다. 4월 28일에는 소위 평화회담이 있었고, 4월 29일에는 딘 군정장관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했고, 5월 1일에 평화회담을 깨뜨리기 위한 군경토벌대의 오라리 방화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작전참모부의 슈 중령이 제주도에 직접 내려와서 브라운 대령 등 토벌대 수뇌부들과 작전을 협의하고 시행한 것이다. 아래의 보고서 내용은 이를 짐작하게 한다.

4월 28일에 행해질 2번 작전계획은 경비대의 김대령, 문소령, 드루스 대위, 한국경찰 고문관 Burns 대위, 그리고 메리트(Merritt)씨 등에 의하여 철저히 논의되었다. 슈 중령은 시종일관 그 논의에 참석했지만 오직 참관만 했다. 그러나 그는 주한미군사령관은 제주도에서 작전은 성공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제주도에서 한국안보를 책임진 군대의 성패에 대해 남한인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김대령에게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김대령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었다. **김대령은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경비대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조는 필자)**

미군정은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성공리에 끝내기 위해 4·3을 철저히 진압하고자 했다. 하지만 항쟁을 진압하는 데에 직접적인 개입을 드러내는 것을 피했다. 국제적인 주목 속에서 미국이 선거 장애물 때문에 당황하는 모습은 감춰져야 했다. 미군정은 이면에 숨은 채 대리인인 한국인 군대와 경찰을 내세워서 4·3을 진압해야 했다. 브라운 대령이 전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시사항에서도 “미군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⁶⁾ 즉 미군정은 현장에 나서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작전계획을 세우고 진압은 경비대와 경찰을 통해 시

행했던 것이다.

심지어 미군은 오라리 사건을 영상을 담았다. 미 육군통신대가 촬영한 소위 ‘May Day’라는 기록영화이다.⁷⁾

“경찰이 불타는 마을을 향해 진격하고 마을 주민들이 방화에 대한 증언”을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미군 군용기 위에서 찍은 제주도 전경, 딘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김익렬 국방경비대9연대장의 이륙 장면, 미군들 도열, 한라산 전경, 딘 군정장관과 맨스필드 제주 군정관의 담소, 딘의 제주도 바다와 마을 시찰 장면, 딘이 제주도 바다를 응시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오라리 사건’은 경찰이 오라리를 방화하고 마을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무장대에게 덮어씌운 조작 사건이다. 미군정은 국제적인 주목 속에서 이면에 숨은 채 단독선거를 성공리에 끝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 군대와 경찰, 우익청년단을 내세워서 항쟁을 진압해야만 했다. 딘 소장의 두 차례에 걸친 제주방문은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강경 토벌정책의 기초를 마련코자 한 것이었다.

제주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이 어떠한지는 당시 민정장관이었던 안재홍의 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48년 5월초 나는 ‘경무부장’ 조병옥, ‘국방경비대 사령관’ 송호성 등과 함께 미군정 장관인 딘을 따라 비행기편으로 제주도에 갔던 일이 있다. 그것은 1948년 4·3 봉기 이래 날로 높아 가는 제주도 인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 우리 일행이 서울에 돌아왔을 때다. 당시 미 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는 ‘경무부장’ ‘조병옥과 ‘국방경비대 사령관’ 송호성을 따로 불러놓고 “미국은 군사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도 모슬포에다가 비행기지를 만들어 놓았다. 미국은 제주도가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

- 6) a. 경비대는 즉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b. 시민들의 모든 무질서 행위는 종식되어야 한다.
c. 게릴라 활동을 신속히 약화시키기 위하여 경비대와 경찰 사이에 확실한 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d. 미군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7) 「Cheju Do May Day」, NARA, RG 111, ADC 7114.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도 제주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⁸⁾

미군정에게 있어 제주도는 자국의 이해에 필요한 군사기지였을 뿐이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미군 지휘부의 인식으로 볼 때 제주에서 강경 진압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할 결과였다.

결국 4월 28일 다음 날에는 딘 소장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했고, 이 날 제주도에 체류하던 부양가족들이 철수되었다. 5월 5일 미군정 최고 수뇌부를 이끌고 다시 제주도에 내려온 딘 소장은 ‘평화협상’에 나섰던 김익렬 중령을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임명함으로써 강력한 토벌작전을 채택했다.

3. 5·10선거 저지와 미군정의 대응

5월 1일의 메이데이에서 5·10일 선거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긴장상태가 고조돼가자 미육군성은 남한 주둔 미군 가족의 한국여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어 하지 중장은 4월 30일 오후부터 5월 3일 오전까지 좌익의 소요에 대비해 남한 주둔 미군에 특별경계령을 내렸다. 하지는 이 경계령을 통해 모든 군용차는 무장경위를 대동할 것이며 각 중요 시설의 보토도 강화될 것이고, 미국인은 30일 오후 11시부터 1일 새벽까지 길에 나오는 것을 금지했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5월 8일 또다시 5·10선거에 대비해 남한 주둔 미군에 특별경계령을 실시했다. 이 경계령에는 미군은 남한이 선거에 대한 공산주의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원조하기 위해 경계령을 내리고 경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미국인은 무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순찰대는 총기로 무장하도록 했고, 기타 군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선거 당일에는 미 태평양 소속 순양함과 구축함 등 2척이 남한의 해역에 들어왔다

경찰도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 4월 30일 경무부장 조병옥이 총선거에 대비해 치안확보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선거 당일에는 향보단과 경찰 인원을 총동원해 투표

8) 『안재홍(安在鴻) 유고집』, 1965년 12월 25일 (평양 조국통일사).

소를 왕래하는 도로의 중요지점과 같이 기타 중요 장소를 경계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5월 3일 선거반대세력의 선거방해를 막기 위해 경무부 내에 비상경비총사령부를 두고 각 관구에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했다. 또 5월 7일 경무부장 조병옥이 선거 당일의 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은 “첫째, 동리(洞里)는 향보단의 자위력으로 방위할 것, 둘째, 동리와 투표장 소간 왕래거리의 위험지점에 경찰과 향보단원이 합류해 경호할 것, 셋째, 투표소 부근에는 경찰과 향보단원의 혼성인원으로 방위할 것, 넷째, 경찰청의 기동경찰대들은 소관 경찰본서를 지키고 각 경찰서의 신편 기동부대는 소할 지서를 유통 시찰해 경비할 것” 등이었다. 그리고 선거 당일 정복 경관이 투표소 2-3곳에 일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20명씩 무장배치하고, 사복형사는 투표소 요소마다 1-2명씩 무장 배치했다. 기마대도 도로 곳곳에 3개 분대를 배치했다. 또 특별행동대, 자전거부대가 편성 배치됐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 경계 태세와, 무장경찰, 향보단원, 우익청년단 등의 삼엄한 경계 태세 속에 5·10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미군정과 경찰의 삼엄한 경계도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좌익과 일반 민중의 투쟁을 막지는 못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선거사무소 습격, 인명피해, 방화 사건, 선거반대 시위 등이 일어났다. 제주도에서는 유격대의 보복을 두려워 한 선거 관련 공무원들이 투표인 명부 열람 등 모든 선거관련 업무 취급을 꺼려함에 따라 선거 실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천면에서는 대략 50%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사임했다. 총 65개 투표소가 선거 당일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군정 관리들이 북제주군의 약 50% 지역에서 선거자료 배포와 수집을 도와야 했다. 선거 기간 동안 폭력 행위가 가장 심했던 지역은 제주도와 경상북도였다.⁹⁾

5·10단독선거에 반대하는 4·3봉기가 일어난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미국인 관리는 투표소에 출입하지 말라는 명령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미군들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기도 했다. 미군들은 피습지역의 현장조사, 선거여론조사 활동, 투표함 수송 및 점검, 정보수집활동, 미군기에 의한 정찰활동 등으로 선거 현장에 뛰어들었다. 투표함 탈취를 막기 위해 미군이 직접 투표함을 수송한 마을도 있었다.”¹⁰⁾

9)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9, 1948년 5월7일-5월 14일.

1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208-212쪽.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또한 미군정은 선거감시요원을 지방에 파견하여 선거감시업무에 들어갔다. 제주도에 서는 3개 반으로 나누어 선거감시활동을 벌였다. 서울에서 파견된 군정장교인 스피어 대위, 테일러 대위, 번하이젤 중위 등 3명은 5월 5일 제주도에 들어와 제59군정중대 장교들과 합류해 선거 감시 활동을 벌인 뒤 5월 15일 서울로 돌아갔다. 이들은 총괄 보고서와 함께 3개 반이 작성한 선거감시보고를 군정청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¹⁾

제주도 민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은 이들이 도착한 다음날인 5월 6일 감시활동을 벌일 지역을 배정했다. 번하이젤 중위는 구좌면에 배치됐고, 군정중대 켈리 대위는 조천면에 배치됐다. 5월 7일 이들 장교 2명은 자신들이 담당한 지역에서 하루종일 투표소를 방문하고 각 면사무소로 투표용지를 전달했으나 2개면에 대한 감시결과는 상반됐다. 켈리 대위는 조천면에 대해 “파괴분자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천면이 규정된 선거절차에 대해 희망이 없는 혼란한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선거 전날 밤 선거반대 유인물이 면이 곳곳에 뿌려졌고, 도로장애물 설치와 함께 여러 곳의 전화선이 절단됐다. 반면 구좌면에서는 훌륭하게 선거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구좌면의 선거 전 단계가 ‘국회의원 선거 시행 규칙’에 지시된 제반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보았다.

스피어 대위는 북제주군 애월면과 한림면, 그리고 추자면을 맡았다. 5월 7일 애월면과 한림면을 방문한 스피어는 각종 도로 장애물과 게릴라가 뿌린 뼈라를 발견했고, 2개 마을 주민들이 산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선거가 끝난 뒤인 5월 12일에는 애월면 주민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실도 확인했다. 등록된 투표자의 투표율이 애월면은 32%에 불과했고, 한림면은 70%였다.

테일러 대위는 남제주군의 선거구의 선거는 당시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가 성공한 만큼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11) 「Report of Election Observation—Cheju Do」, NARA, Record of the Department of State Decimal File 895 LM80 Roll 3.

이들의 선거감시활동은 통역을 대동한 채 선거 관련 사무소와 일부 유권자들만을 만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자세한 선거상황을 살펴보기에는 무리지만 제주도의 투표 준비 및 투표 상황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당시 5·10단선반대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지역과 그렇지 않았던 지역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1948년 5·10단독선거 저지 투쟁은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4·3은 그 가운데 가장 조직적인 투쟁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좌파 세력 뿐 아니라 김구를 비롯한 일부 민족지도자들도 단독선거라 하여 반대한 선거였다. 5·10선거는 누구를 지지하여 당선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단선찬성과 단선반대라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냐 거부냐는 중요한 문제였다. 4·3봉기세력은 5·10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적극적인 선거반대투쟁으로 항쟁지도부는 선거활동에 관여하는 선거위원회 인물들과 공무원 그리고 입후보자에 대한 테러를 강행했다. 동시에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유권자 등록 자체를 거부토록 하는 선거투쟁도 병행했다.

결국 제주도 선거는 3개의 선거구 중 북제주군 2개의 선거구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화 처리되었고, 6월 23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결국 선거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미군정은 단독선거반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4·3봉기가 일어나자 제주도의 5·10선거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비대의 토벌 작전, 선무 공작 등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미군정의 목적은 제주도에서는 성공할 수 없었다. 결국 미군정의 노력은 제주도에서는 실패로 돌아갔고, 미군정과 미국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다. 이후 미군정은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성공시키기 위해 4·3을 철저히 진압해 나갔다. 5·10선거가 실패하자 미군정은 곧바로 구축함을 제주도 연안으로 급파했고, 6사단 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을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해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 검거작전에 나선 경비대와 경찰을 총지휘하도록 했다.

4. 5.10선거 이후 미군정의 인식과 강경진압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의 모든 고문관들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주도 주둔 경비대나 경찰 등 제주도의 모든 작전을 지휘·통솔하는 최고 지휘권을 맡았다. 이와 함께 주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제주도 주둔 59군정중대와 제주도 지구 CIC에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브라운 대령을 지원하도록 명령했다.

최고 지휘권을 부여받은 브라운 대령은 1948년 5월에 제주를 방문하여 6월 말까지 제주도 사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했다. 브라운(Brown) 대령 보고서는 ‘1948년 5월 22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도에서의 활동보고’라는 제목으로 1948년 7월 1일에 미군 제6사단 20연대장 로스웰 브라운 대령이 주한미군 군정청사령관에게 제출한 문서이다.¹²⁾ 이 문건은 4·3 초기 미국 및 미군정의 43에 대한 시각과 대책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제주도 주민들을 심문한 결과 남로당 조직에 관한 정보, 제주도민들의 남로당과의 연관성 여부, 남로당을 통한 공산당의 활동이 제주도에서 5·10선거 이전에 성공했던 몇 가지 요인, 5·10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거폭동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1948년 5월 22일에 취해진 조치, 제주도에 폭동의 재조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된 조치들”의 6가지 사안을 담고 있는 데 당시 미군정 제주도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사안에 따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민과 남로당과의 연관에 대해서 브라운은 “제주도에 남로당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6명 이내의 훈련받은 선동가와 조직책이 본토에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산주의 사상과 그 목적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500~700명의 동조자들이 이 6명의 특별조직책과 함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로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6,000~7,000명은 공산주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단체에 가입하려는 열망도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경제적인 곤궁함으로 인

12)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from 22 May 48 to 30 June 1948」, NARA, RG 338, Entry, 11070, Box, No. 68.

위의 문서를 포함한 브라운 대령의 보고서(Rothell H. Brown Papers)는 NARA 이외에 미육군군사연구소(U.S. Military History Institute) 에도 소장되어 있다. 이 연구소는 미 펜실베이니아주 Carlisle 의 U.S. Army War College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는 제6보병사단장 올랜드 워드 장군 문서(The Orlando W. Ward Papers, Korea, 1946~1949 and Other Material)도 소장되어 있다.

브라운 보고서는 1폴더의 작은 분량이나 43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주도 남로당 조직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이임 이후 1950년부터 1963년까지의 서한철 2폴더 분량이 더 있다.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 활동보고서’를 낸 직후 제6사단 20연대장직에서 물러나 한국을 떠났다.

해 남로당이 제시한 경제적인 보장에 쉽사리 설득당했다”고 파악했다.

나아가 제주도에서 남로당 활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59군정중대의 민간 업무장교들의 공산당에 대한 무지와 제주도 경찰에 대한 통제의 실패, 한국정부 관리들의 독직과 비능률, 곤궁한 경제적 생활, 미군정중대 요원들과 방첩대 간의 협조 부족” 등을 꼽으면서, “지나친 잔혹행위와 테러가 제주도에 도착한 경찰 예비 병력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브라운은 계속해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첫째, 최소한 1년 동안 제주도에 경비대 1개 연대를 주둔시킬 것, 둘째, 제주도 경찰을 효율적이고 훈련된 경찰로 재조직할 것, 셋째, 폭동의 재조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식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넷째 제주도 행정기관을 가능한 부패와 비효율성이 없는 기관으로 만들 것”을 추천했다.

브라운 대령은 4·3이 일어난 원인의 하나가 경찰의 탄압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인식과 대응은 달랐다. 다음의 내용은 브라운의 4·3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저는 제주도 폭동의 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제주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절대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점은 제주도가 공산분자들의 기지로 조직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의 야만성이나 정부의 기능이 비효율적이어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비판은 섬에서의 공산분자들의 의도에 비하면 부수적인 사실일 뿐입니다.¹³⁾

브라운은 4·3이 일어난 다른 원인은 무시한 채 공산분자의 기지로 공산주의자의 의도로만 움직이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항쟁이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는 경찰과 서청의 폭력, 생활난, 통일에 대한 열망 등 모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제주도를 공산분자의 섬, 빨갱이의 섬으로만 몰아가야 토벌의 명분

13) 브라운 대령의 보고서 중 일부로 1948년 7월 1일 상관인 올랜드 워드 6사단장에게 보낸 서한이다. NARA, RG 338, Entry No. 11071, Box No. 2).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이 서기 때문이다. 즉 ‘4·3의 원인에는 관심이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가 실제적인 브라운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는 미군정의 정책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항쟁의 원인을 무시하고 브라운 대령이 입장이 사태 해결 방안으로 처음 투영된 것은 제주도를 빗질하듯 싹쓸이하는 ‘평정작전(Pacification Plan)’이었다. 평정작전은 중산간 지역을 고립시키면서 제주도를 빗질하듯 무차별적인 토벌 작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이 작전으로 1948년 5월 하순부터 6월말까지 제주도민 5천여 명을 체포함으로써 제주도민에게 공포심만을 심어주었다.

주민들에 대한 선무작전의 하나로 제주비상경비사령관 최천과 회담을 통해 1948년도 하곡수집 철폐 계획도 발표했다. 브라운 대령은 이날 “내가 내려오기 전에는 경찰과 육해군 사이에 서로 협력을 안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다”며 “지난 5·10선거 때는 성적이 좋지 못하였는데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6월 23일 재선거 때에는 진정돼 자유롭게 대표를 선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브라운 대령의 부임은 5·10선거의 좌절로 미국의 위신에 타격을 입힌 제주도 사태를 무력진압하고, 반드시 재선거를 성공시키겠다는 미군정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에 따라 브라운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선거를 6월 23일에 재선거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들어갔다. 브라운 대령의 ‘중산간 지역 고립작전’ 아래 박진경 연대장의 제11연대는 강력한 검거작전을 진행했다. 브라운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을 누비며 경비대의 현황보고를 받고 작전을 독려했다.¹⁴⁾ 브라운 대령 휘하 작전 참모인 리치(James Leadh) 대위는 대부분의 작전 지역에 참여했다.¹⁵⁾

하지만 중산간 지역을 고립시키면서 제주도를 빗질하듯 평정작전을 벌인 브라운 대령은 6·23재선거까지는 제주도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호언했으나, 그의 무차별적인 진압작전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미군정은 6·23재선거를 치를 상황을 만들지 못하자 6월 10일 행정명령 제22호를 공포하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평화롭고 혼란 없는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제주도의 재선거를 무기한 연기했다. 미군정은 제주도 소요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4)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154-157쪽.

15) Charles L. Wesolowsky(4·3당시 9연대 고문관) 증언, 미국 플로리다, 2001년 10월 22~23일.

6·23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제주도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¹⁶⁾

6·23 재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자 미군정은 소탕작전을 더욱 강화해 경비대 1개 대대 당 2중대 규모로 편성된 4개 대대를 제주도의 동서남북에 주둔시켜 모든 대대가 공동 목표로 산간 고지대를 향해 내륙으로 전개하는 작전을 벌였다. 이 작전으로 3000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575명이 수용소에서 경비대와 미군으로 구성된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았다.¹⁷⁾

재선거의 무기연기로 또다시 제주도에 강경진압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6월 18일 제 9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암살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의 부대장 및 야전지휘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인물의 한 명으로 평가받던 박연대장의 암살 사건은 미군정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 군정장관 딘 소장뿐만 아니라 미군사고문단 로버츠 준장과 그의 참모들이 대거 제주도에 내려왔다. 곧바로 CIC와 범죄수사대(CID),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다. 부하병사에 의한 박진경의 암살은 로버츠 준장으로 하여금 강경책을 취하게 했다. 이에 따라 경비대원들을 무장해제하였으며, 군부 내 숙군작업까지도 실시하게 되었다. 박진경의 암살 이후 실시된 숙군작업은 한국군내 최초의 숙군작업이었다.¹⁸⁾

미군사고문단 로버츠 준장은 6월 경 웨슬로스키 중위를 국방경비대 9연대 고문관으로 파견했다. 당시 9연대장은 제11연대의 부연대장을 맡았던 송요찬 소령이었다. 로버츠 준장의 명령에 따라 웨슬로스키 중위가 작전고문관을 맡았다.

웨슬로스키 중위는 제11연대와 함께 여러 차례 진압작전에 참가했으며, 한라산 윗세오름까지도 올라가 작전에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지형이 험해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소를 이용해 물자보급을 하면서 2~3주 동안 남쪽지역에서 한라산을 향해 소탕작전을 벌인 적도 있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정부 수립을 앞두고 딘 소장은 브라운 대령의 보고서를 토대로 제주도 민정장관 에드가 노엘(Edgar A. Noel)에게 브라운 대령의 건의사항을 완전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주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단언했다. 또한 딘 소장은 남한의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제주도 문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두도록

16) GHQ, FEC, G-2 Intelligence Summary N0. 2134, 17 June 1948.

17) Hq. UAFIK, G-2 Weekiy Summary No. 144, 18 June 1948.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 1967, 441쪽.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지시했다.¹⁹⁾

이와 같은 미군정의 인식과 행동에는 제주도에서의 진압 작전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10선거가 실패로 돌아가고 뒤이은 브라운 대령의 진압작전이 의도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미군정은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맞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상황은 곤혹스러운 것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미군은 여전히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으면서 제주도 사태를 속속들이 파악했고,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한미군사행정협정에 따라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단장:로버츠준장)은 한국의 육군과 해안경비대, 국립경찰 등 보안군의 조직과 행정, 장비, 훈련을 책임지게 되었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이후 제주도의 진압작전은 초토화 작전으로 나타났다. 이 작전은 미 군사고문단의 정책적 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제주도 주둔 미 고문관들도 미군의 철수할 때까지 제주도에 남아서 현지 작전에 대한 조언과 한국군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²⁰⁾ 미 군사고문단 풀러 대령은 “제주도 반란군들은 송요찬 중령의 적극공세로 인하여 서서히 진압되고 있다.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고문관들로 대체되어야 한다”면서 진압작전에 대한 미군의 관심과 개입이 지속되어야 함을 지적했다.²¹⁾

보고서 곳곳에 국방경비대의 강경진압작전에 대한 우려가 보고 되기도 하였지만, 로버츠 준장은 12월 20일 “송요찬 국방경비대장의 초토화 작전을 칭찬하고 이러 사실을 언론과 대통령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추천”할 정도로, 국방경비대의 강경진압작전을 용인했다.²²⁾

한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미군도 진압작전에 나섰다. 미군이 어느 정

19) Brown Report.

20)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미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8년 9월 3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8, 71쪽.

21) 「미군사고문단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미군사고문단 주간활동1948년 12월 6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8, 74-76쪽.

22) 로버츠 준장 공한철에는 송요찬 국방경비대9연대장의 지휘하에 제주도민과의 협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Operations on Cheju-Do」.

도 작전에 참여했는지는 불확실하나 ‘미 해군이 기항하여 호결과를 냈다’는 이승만의 발언을 통해 미군의 역할을 일부 엿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발굴한 미국 문서에는 이승만의 발언 직후 미 해군이 제주도를 방문한 사실을 보여준다. 미극동군해군사령부 지원단이 작성한 문서(1949년 2월 2일)에는 미 해군 함정 3척이 인천을 방문해 1월 24일 함정에서 연 연회에 이승만 대통령, 무초 대사, 로버츠 장군 등이 참석했다고 돼 있다. 문서에는 “무초 대사가 한국정부가 (미 해군 함정의) 제주도 방문을 간절히 바란다며 제주 방문 방안을 상의했고, 이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라고 돼 있다. 이들은 1월 25일 3시간 남짓 제주에 기항해 미군 고문관과 경찰청장 등을 만났다. 이러한 장면은 미군이 진압작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와 미군과의 교감 속에서 미 해군 함정들이 기항했음을 보여준다.²³⁾

무장투쟁이 실제적으로 거의 종결된 1949년 봄 시점에서 4·3항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1949년 3월 10일 주한미사절단 참사관 에버레트 드럼라이트(Drumright)는 로버츠 준장에게 제주도 상황과 관련해 서한을 보내, “제주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²⁴⁾ 로버츠 준장은 회신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제주도의 게릴라와 군사작전 등에 대해 강력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²⁵⁾

주한 미대사 무초는 1949년 4월 4일 이승만을 만나 “한국은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만연하는 게릴라 도당을 제거하고 보안군을 훈련시킴으로써 남한에서의 입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제주도 진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무초의 강경한 진압작전을 암시하는 발언은 4월 9일에 미 국무장관에 보고서에서 제주4·3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나타났다.²⁶⁾

제주도가 남한에 혼란을 퍼뜨리고 테러를 가하기 위한 소련의 주요한 노력의 장소로

23) 허호준, 「제주4·3의 전개와 미국의 역할」, 『제주4·3, 진실과 정의』, 제주4·3연구소·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8, 162-163쪽.

24) 「드럼라이트가 로버츠 장군에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10, 102-103쪽.

25) 「로버츠 준장이 드럼라이트에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11, 64-66쪽.

26) 「특사 무초가 국무장관에게(1948년 4월 9일)」, NARA, RG319, Entry.57, Box. No.59.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선택되었다는 것은 소련의 통제를 받은 라디오 방송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선전의 본질로부터 분명해진다. 이것(남한에 혼란을 퍼뜨리고 테러를 가하기 위한 소련의 노력)은 제주도 북쪽의 한반도 육지부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지속적이고도 유사한 작전으로 지속되었다. 대한민국 후방 지역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소요와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무대에서 영속시키고자 했던 대량학살의 싸움에 38선의 방위군 부대들을 소모시키지 말아야 한다.

소련 요원들이 큰 난관 없이 제주도에 침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신성모 장관은 그들 가운데 다수가 북한으로부터 소형 어선 편으로 (제주도에)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신성모는 한국 해안 경비대(the Korean Coast Guard)가 제주도 해안을 정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해안 경비대 함정의 소규모 승무원으로서는 (제주도의) 빈틈 없는 봉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국무총리와 신성모 장관 사이에서 특히 국회의 토론에서 논쟁거리로 존재했을 동안 제주도 주위에 소련 함선과 잠수함들이 맴돌고 있다는 지속적인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다.

“소련이 남한 테러의 전초기지로서 제주도를 채택했고, 소련 요원들이 어려움 없이 제주도에 침투하고 있다”는 무초의 발언은 그동안의 4·3에 관한 미군정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좌익 세력과 4·3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의 미군정의 주된 인식은, 남로당의 주도세력이라는 정도였다. 나아가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북한과의 연계설이다. 제주도가 소련의 위성기지처럼 취급된 적은 없었다. 제주도 현지 고문관들조차도 외부세력의 침입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나온 무초의 발언은 이승만에게 더욱 제주도를 토벌하라는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승만의 제주 방문 이후 주한미대사관은 “3월 시작된 전면적인 소탕작전은 4월 말 사실상 막을 내렸고, 대부분의 반란군과 동조자들이 죽거나 체포됐고 사상을 전향했다”고 국무성에 보고했다. 또한 이들은 미 국무부에 제주도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 무장대와 제주도민의 현황, 식량문제, 그리고 1949년 5월 10월 치러진 재선거에 대한 사안 등 제주 상황을 점검했다.

결국 만 1년에 걸친 진압 작전 끝에 실제적인 제주도에서의 무장투쟁은 막을 내렸고,

1949년 5월 10일에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존 메릴의 지적대로 4·3의 발발 자체가 한국에 생명력 있는 정치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수립하겠다는 미국의 점령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용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전후 점령군에 대하여 제주도에서와 같은 격렬한 대중적 저항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²⁷⁾

저항에 대한 대가는 참혹했다. 교전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막후에서 분주하게 움직인 미군정은 한국인 군과 경찰보다 잘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주에 대한 학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5. 나가며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조선의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룸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미소합의로 독립국가를 세우려던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안은 폐기되었다.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총회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을 구성하고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의했다.

1948년 1월 8일 유엔한국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왔으나, 소련과 북한은 “미소 양군이 철수한 뒤에 자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다. 유엔은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는 안을 2월 26일 소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선거 날짜는 5월 10일 정해졌다.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실시된다는 소식은 독립국가를 꿈꾸던 조선인에게는 날벼락이었다. 좌익, 중도파뿐만 아니라 김구, 김규식 등 우익민족지도자들도 단독선거를 완강히 반대했다. 전국적으로 ‘단독선거반대, 단독정부수립반대(단선단정반대)투쟁’이 일어났고, 가장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곳은 제주였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단독선거 저지를 기치로 무장봉기가 제주에서 일어났다.

27)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노민영 역음,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 74쪽.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모스크바삼상회의 미소합의를 깨고 조선문제를 유엔에 이관한 미국은 국제적인 주목 속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성공리에 치러야하는 부담이었다. 따라서 단선 저지를 내세운 4·3은 미국에게 곤혹스러운 사건이었다.

4·3 발발 직후에 이미 미 군정장관 딘은 강경 진압을 주장했고, 제주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은 초토화 작전 뿐이라는 의사를 자신의 정보 장교들을 통해 제주 지역 책임자들에게 수시로 전달했다. 제주에 대한 진압 작전의 지역에 지휘권은 미군에게 있었으며, 브라운 대령은 강경 진압 작전을 벌였다.

미군의 역할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은 군사고문단을 통해 제주 진압 작전에 투영되었다. 초토화 작전이 전개될 당시 제주에는 임시고문단원과 방첩대, 그리고 미군정 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주한 미사절단과 대사관도 제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고 상황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이들은 때로는 제주 해안에 괴선박이 출현했다거나 혹은 소련의 기지설 등의 허위 첩보를 유포해서 이승만 정부의 강경 진압을 부추기도 했다.

미군정은 각종 보고서나 정보원, 혹은 현장 목격을 통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서 군경토벌대가 무차별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는 발언으로 유명한 브라운 대령조차도 경찰의 무차별적인 테러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후에 벌어진 군경토벌대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을 방조했다. 미 군사고문단은 토벌대의 과도한 잔혹성을 보고하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이승만이 원조를 요청했을 때도 국내의 소요를 완전히 진압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 진압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겉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부르면서 한국인들의 야만적인 진압행위를 비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도리어 이를 방조하거나 부추겼던 것이다. 남한을 반공의 전초 기지로 상정한 냉전 시기의 미국으로서의 당연한 결론이었다. 물론 드러나지 않고 이면에서 움직이는 미국의 의도대로 제주 4·3에 대한 진압은 한국인을 통해 이루어져졌고 학살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제주 섬은 고립된 채 피와 눈물과 시체의 삼다도(三多島)가 되어갔다.

[주제발표문 2]

피해자중심의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진실규명 및 인권·평화 증진운동의 과정과 의미

— 참전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1. 들어가며

우리는 한국전쟁을 68년 전에 발생한 오래된 과거의 일로 잊고 지낼 때가 많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사국 간에 종전협정을 아직까지 맺지 못했기에 한국전쟁은 엄연히 휴전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한국전쟁이 남긴 수많은 인권침해사건들의 상처가 남아있다. 노근리사건도 한국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 중 하나이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을 도우러 왔던 참전미군에 의해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발생한 피난민 학살사건이다.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하고 보도한 한 신문 기사에는 최대 400명이 잔혹하게 학살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한국판 미라이 학살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민간인 인권 침해사건’이다.

노근리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활동은 노근리사건으로 다섯 살 아들과 두 살배기 어린 딸을 잃고 자신의 아내가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 가족인 고 정은용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장이 시작했다. 정 회장은 1960년 10월, 미국 정부가 서울에 운영했던 주한미군 소청사무소에 소청서를 제출했다. 이 소청서는 노근리사건의 전말을 다루면서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노근리사건은 국제법적으로 ‘전쟁범죄(War Crime)’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미국 정부의 공식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실 이 소청서 제출은 미국을 상대로 그 후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인권전쟁과 역사전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미군 소청사무소는 ‘제출기한이 지나서 처리할 수 없다’는 답신만 주고 넘어갔다.

그런데다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나 고 정은용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고, 노근리사건에 관한 중편실화소설 ‘버림받은 사람들’을 1977년 ‘월간 한국문학 11월호’에 발표하는 문학적 방법을 선택했다. 정회장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군사정권의 시대는 아무리 진실이라도 미국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었다. 그 뒤에도 정 회장은 10여 년을 준비한 끝에 1980년대 말부터 노근리사건에 관한 장편소설을 집필하고 있었다.

1991년의 어느 봄날, 필자는 교자상 위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부친이 집필한 노근리사건 장편 실화소설 원고를 읽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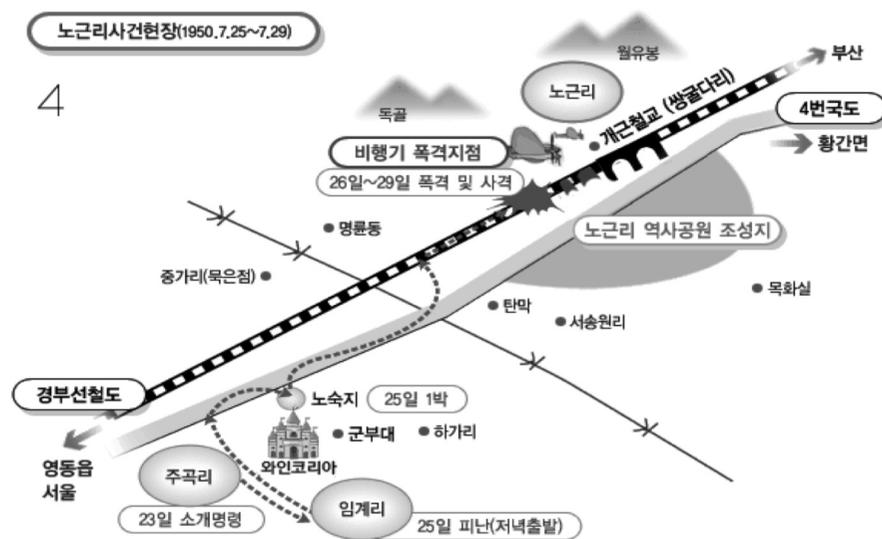
“1950년 7월말, 노근리사건 당시 경부선 철도 위에 있던 500-600명의 피난민 대열에 향해서 미군기가 무차별 공중폭격을 가해서 약 100명이 즉사했다.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 7기갑연대 소속 군인들은 살아남은 피난민들을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3박 4일 70시간 동안이나 노근리 쌍굴 안에 감금한 채 밤낮없이 기관총 및 소총사격을 가해서 수백 명의 무고한 비무장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생존피해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시체들을 바리케이드로 쌓아야 했고, 희생자들의 핏물이 섞인 물을 먹어야만 했다.”

아무리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된 사건이었다. 노근리사건의 피해자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고 피해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심지어 어느 가족은 모든 식구가 몰살당했을 정도로 잔혹하게 인권이 유린되었다.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피난하는 비무장의 어린이, 노인, 여성 등 피난민들을 상대로 ‘인간사냥’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군들이 미군을 해칠 의사도 전혀 없고, 위해(危害)를 가할 힘도 없는 피난민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인권침해를 부친은 문학의 힘을 빌려 고발하고 있었다.

나는 가해미군의 잔학한 행위에 대해 경악했고, 분노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 부친의 장편 실화소설 집필 작업을 돕다.

필자는 그 당시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코스를 마치고 졸업 논문을 써야하는 시점이었다. 부친의 원고를 읽으면서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슬픔과 한을, 그리고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남긴 크나큰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 노근리 사건 개요 〉

나는 이미 연세 70세의 고령에 들어선 부친의 한을 다소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나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미루고 부친의 소설 집필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결심했다. 그 뒤 2년 반 가까이 필자는 부친의 소설 집필에 필요한 책을 국내외에서 수집해드리고 부친이 쓰신 원고를 10차례나 퇴고도 해드렸다. 때로는 쟁점이 될 만한 예민한 사항에 대해 토론도 하면서 부친의 집필 작업을 정성을 다해 도와드렸다.

소설 원고가 탈고되자 필자는 소설 출간을 맡아줄 출판사를 찾느라 고려원, 한길사 등 여러 출판사를 전전해야 했다. 그러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군사정권의 잔재가 남아 있는 제6공화국 시절이라서 출판사들이 노근리사건과 같은 예민한 주제를 담고 있는 소설 출판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1994년 4월, 장편실화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출간할 수 있었다.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정은용 저,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3.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진상규명활동 시작하다.

장편소설 출간을 계기로 부친과 나는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대책위원회(이후 피해자대책위로 칭함)' 창립을 서둘렀으나 1994년 6월, 겨우 5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하는 일도 어려운데 감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할 수 있겠냐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자대책위 참여를 기피했고, 심지어 "가당치도 않은 일을 시작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나의 부친도 필자에게 "한국의 현실에서 노근리 관련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대책위원들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피해자대책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차마 그만둘 수 없었다. 부친의 말씀대로 노근리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았다.

필자가 피해자 대책위원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여러 정보기관들의 감시(?)가 늘 뒤따라서 수년 동안 위협과 불안 속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부친이 피해자대책위의 위원장을, 필자는 대변인 및 기획위원을 맡았다. 피해자대책위가 결성되자 맨 먼저 서울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처음에는 대사관 정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애를 먹어야 했다.



진정서 제출을 위해 서울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하는
피해자대책위 위원들(1994년 7월)

그 후 피해자대책위는 김영삼 대통령과 국회의 각 정당 대표, 그리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앞으로 20차례 가까이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건해결을 위해 진력했다. 하지만 소위 문민정부라 부르는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한국 국방부로 이첩했고, 한국 국방부는 미8군사령부로 이첩하고는 끝이었다. 고양이에 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는 형국이었다. 미국 정부와 상하원은 피해자대책위의 진정서에 대한 아무런 답장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대책위는 포기하지 않았고 1997년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USA)를 통해 미국 정부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는 “노근리사건 현장에 미군이 없었다.”는 거짓말 답변을 해왔다. 당시 필자는 이미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이 소장하고 있는 노근리사건 관련 문헌자료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미 국방부 측에 노근리사건 당시에 사건현장에 미군이 주둔했음을 증명하는 문서기록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군이 사건현장에 있었으나 사건에 개입한 정보는 없다”는 거짓말 답변을 보내왔다. 한국의 소위 우방이요 혈맹이라는 미국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필자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위하여 필자는 내외신에 노근리사건을 홍보하는 외에 학문연구에 더욱 더 매진했다. 왜냐면 미국 정부가 노근리사건의 실존(實存)조차 부정했던 터라 학문적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인 차원에서의 역사적 진실규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나는 역사학을 전공한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의 최병수 교수에게 공동연구를 제의하여 노근리사건에 관한 최초의 역사학 논문을 학계에 발표했다. 그때가 AP통신이 노근리사건에 대한 탐사보도를 하기 7개월 전인 1999년 2월이었다. 이 논문도 AP 취재팀의 취재를 돕고자 AP에 제공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어서 노근리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 여부를 연구한 국제법 공동논문도 발표했다. 이러한 활동은 노근리사건을 두고 한국과 미국간에 벌어질 역사전쟁이자 인권전쟁을 본격적이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기도 했다.

4. AP의 노근리사건 탐사보도와 한미 양국의 진상조사 추진

필자는 노근리사건에 관련된 새로운 문서증거 발굴에 주력했고, 새로운 기록들이 찾아질 때마다 내외신 언론기관에게 제공해주는 등 4년 가까이 노근리사건의 홍보에 매진했다. 이런 끈질긴 노력으로 노근리사건이 세상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1998년 3월, AP가 노근리사건 취재에 착수했다.

정은용 대책위원장과 대책위 대변인인 필자는 노근리 소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하고 있는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들과 역사학논문 등을 AP취재팀에 제공하며 취재를 힘껏 도왔다.

이 같은 피해자들의 끈질긴 활동 결과로 1999년 9월 말, 드디어 AP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탐사보도를 했다. AP는 피해자대책위에서 제공한 자료 외에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사건에 관련된 새로운 미군 전사기록들을 발굴하고 가해 미군의 증언들을 확보해서 심층 보도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NBC, ABC 등 미국 유수언론들이 앞다투어 대서특필했다. 한국의 모든 신문, 방송들도 연일 노근리사건을 톱뉴스로 다루었다.

그러자 경남 마산의 곡안리 폭격사건, 경북 예천의 산성동 폭격사건, 경북 고령의 왜관교 폭파사건, 전북 익산역 오폭사건, 충북 단양의 곡계굴 폭격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미군에 의한 민간인살상사건이 추가로 주장되어 짧은 기간에 60여 건의 미군관련 민간인 살상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후에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학살사건, 보도연맹사건 등 한국 경찰과 국군 그리고 북한군 등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들도 국내외의 언론을 통하여 함께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도 노근리피해자대책위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각각의 피해자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처럼 노근리사건은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고 역사의 뒷안길에 묻혀있던 과거사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주었고, 과거사 사건들 피해유족들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적 사건이자 상징적 사건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과거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비극적 사건이나 일부 피해자들의 사적 기억만이 아닌, 반전과 평화라는 새로운 가치로 승화되고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노근리사건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인권보호 필요성과 인권 증진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도 평가받게 되었다.



풀리처상을 수상한 최상훈, 찰스 헨리, 마사 멘도자 기자

2000년 풀리처 상을 수상한 AP 기자들

노근리사건이 한미양국의 관심사를 뛰어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부각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한미 양국은 1999년 10월 초, 노근리사건 진상조사를 착수했다. 한미양국은 장관급 인사에게 각각 노근리사건 대책단장을 맡겼다. 한국 정부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미국 정부는 코헨 국방부장관을 대책단장으로 임명



제국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하였다. 그리고 그 산하에 진상조사반을 각각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정부의 진상조사반장은 1999년 10월, 국방부 정책보좌관(중장급)이 맡아 진상조사를 시작한 이래 15개월 동안 연인원 12,700여명을 투입하여 865건의 문헌자료 검토, 144명의 달하는 현장목격 생존자, 신고자, 참고인의 증언청취, 9회에 걸친 현장검증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미국정부는 육군감찰관인 애커먼 중장을 진상조사반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미측 진상조사반원들이 매릴랜드, 미주리, 캔자스 국립문서보관소 등 6개 기관에 보관된 한국전쟁관련 자료 100여 만건을 검색하여 노근리 주요 자료 490건(증언록 포함)을 한국 측에 제공하였다. 미국정부는 미국전역에 있는 7,000여명의 노근리사건 관련 한국전 참전군인 등을 추적, 탐문하여 175명에 대해 6,500여 쪽에 이르는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한측 증언자 44명분과 미측 175명분의 증언록을 상호 교환하였다.¹⁾ 이처럼 조사기간 동안 한미 양국은 노근리사건 진상조사, 즉 사건의 정확한 기억을 복원하는 일을 두고 한·미 간의 기록전쟁이자 역사전쟁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노근리사건 진상조사 초기에 미국 정부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친 후에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에 의해 발생한 다른 유사 사건들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개월 후인 2000년 1월, 미국 정부는 그 약속을 번복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정부의 태도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런 문제 말고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도 있었다. 사실 노근리사건의 진상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면 노근리사건에 관련된 미군의 군사문서를 한국정부에 제대로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다른 미군 관련 유사 사건으로의 확산을 우려해서인지 핵심 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노근리사건이 가해국인 미국에게는 그 진실을 가능한 한 축소해서 덮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이자 현대사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상을 밝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만 했다. 어쨌든 진상조사

1) 노근리사건정부대책단(국무조정실), 노근리사건 진상조사 및 사후대책 설명자료, 2001.1, 2쪽.

기간 내내 미국 정부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 의지가 부족했고 진실을 축소하려는 태도가 엿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피해자대책위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가두 쫓기대회 개최, 주한 미국대사관 항의방문, 미 국방성을 방문하여 고위관료 면담 실시, 미 대통령 및 미 상하의원 앞 진정서 발송, 미국 워싱턴 소재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차례 기자회견 개최, 한국 국회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노근리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 통과’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 특히 AP통신은 지속적으로 보도해서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주었다.

또한 2000년 2월, 필자는 노근리사건의 기억을 정확히 복원하는 일을 학문적 연구로 기여하고, 노근리사건이 지닌 인권과 평화라는 대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을 연구진으로 하는 노근리평화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동을 개시했다. 연구소 설립 초기에는 노근리사건의 진상, 국제법적 책임 등 노근리사건에 관한 연구에 집중했다. 후에는 연구의 범위를 넓혀 인권, 평화에 관한 연구도 폭넓게 진행하였고, 여러 연구서들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미간에 진상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을 때에 국내 일부 정당과 일부 언론들 그리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전쟁 당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도와준 미군의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며 노근리피해자대책위의 활동을 반미(反美) 활동이라며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피해자의 아픈 가슴을 더욱 힘들게 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한국사회가 진보와 보수 간에 지나치게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한 사회라서, 노근리사건을 ‘인권보호 및 생명존중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진영논리로 평가하고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 클린턴 미대통령, 드디어 유감표명 성명서 발표하다.

피해자대책위가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노근리사건의 실존은 인정하되 사격명령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조사를 매듭지었다. 그리고 노근리사건 발생 50년 만인 2001년 1월 12일, 한미 양국은 1년 3개월간의 공동조사를 마치면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노근리사건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유감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표명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 일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²⁾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한미 간에 역사전쟁을 했다고까지 기술한 바 있다. 사과 성명서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사실 이 유감표명 성명서는 골리앗 같은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소년 다윗과 흡사한 피해자 공동체가 반세기 동안 벌인 역사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이기도 하지만, 인권회복을 위한 전쟁 끝에 얻어낸 의미 있는 승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국은 세계경찰국가로서 제1,2차세계대전 참전에 이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을 수행했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노근리사건과 같이 참전 미군에 의한 사건들이 대한민국에만 약 120건에 이르고, 다른 전쟁들에서도 미군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노근리사건 이외에는 미군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나 사과 성명서를 낸 적이 없다. 그렇기에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이루어낸 성과는 한미관계사(韓美關係史)나 인권사(人權史) 측면에서 볼 때도 기념비적인 사례로 평가받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STATEMENT BY THE PRESIDENT

January 11, 2001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deeply regret that Korean civilians lost their lives at No Gun Ri in late July, 1950. The intensive, yearlong investigation into this incident has served as a painful reminder of the tragedies of war and the scars they leave behind on people and on nations.

Although we have been unable to determine precisely the events that occurred at No Gun Ri,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concluded in the Statement of Mutual Understanding that an unconfirmed number of innocent Korean refugees were killed or injured there. To those Koreans who lost loved ones at No Gun Ri, I offer my condolences. Many Americans have experienced the anguish of innocent casualties of war. We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the sense of loss

2) 국무조정실 노근리사건대책단, 『노근리사건 관련자료집』, 국무조정실 노근리사건대책단, 209-213쪽

and sorrow that remains even after a half a century has passed. I sincerely hope that the memorial the United States will construct to these and all other innocent Korean civilians killed during the war will bring a measure of solace and closure. The commemorative scholarship fund that we will launch will serve as a living tribute to their memory.

As we honor those civilians who fell victim to this conflict, let us not forget that pain is not the only legacy of the Korean War. American and Korean veterans fought shoulder to shoulder in the harshest of conditions for the cause of freedom, and they prevailed. The vibrancy of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trong alli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closeness of our two peoples today is a testament to the sacrifices made by both of our nations fifty years ago.

2001년 1월 12일(한국시간 기준), 미국 정부는 유감표명 성명서를 발표하며 노근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건의 희생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 280만 달러를 제공하고 118만 달러를 들여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한미 양국 어느 나라도 사후조치와 관련해서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후조치의 목적과 대상도 매우 불합리했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12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작 피해자들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 당사자의 강한 반발과 전 국민적인 반대 여론으로 결국은 시행될 수 없었던 사례와도 매우 유사하다.

사실 미국 정부는 노근리사건 이외에 다른 미군 관련 사건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한국전쟁 당시 모든 미군 관련 사건들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탑 건립과 장학금 제공을 사후조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이에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다른 미군 관련 유사사건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진상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한정하여 추진할 것을 한국 정부를 통해서 2년 넘게 미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대책위의 요청을 미국 정부가 거절했고, 약 400만 달러의 후속조치 사업추진 예산도 2007년 6월 30일, 미국 국고로 환수 조치되어 후속조치 사업은 결국 무산되었다. 피해자대책위가 이렇게 결정했던 것은 다른 유사 미군사건 피해자들의 인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권회복과 피해구제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일부 피해자분들은 적지 않은 돈을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아도 불합리한 사후조치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자신만의 국익을 앞세워서 불합리한 사후조치를 강행하려 했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한국정부가 피해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사후조치 사업을 합의해준 것은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와 인권을 도외시한 부끄러운 처사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01년 1월, 한미 양국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1999년 피해접수를 받은 개개인에 대한 피해사실 심사는 유보되었다. 이에 노근리사건의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수차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와 진상 재조사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들 피해자들의 요구에 미온적이었다.

6. 노근리사건특별법 제정과 노근리평화공원 조성

이에 정은용 유족회장은 2002년 10월, 국회의장 앞으로 ‘노근리사건 진상 재조사와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필자는 2년 가까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의원들에게 노근리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언론에 다각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노근리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전략적이면서 끈질긴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한미관계 악화를 내세워 집요하게 진상 재조사와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책위가 노근리사건특별법 입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 노근리사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뒤 국회와 정부 간의 협의를 거쳐 2004년 2월 9일, 우여곡절 끝에 당초에 제안했던 법안명이 바뀌어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행하여진 한미 양국 정부의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진위 여부를 심사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노근리사건특별법의 제정은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강인한 집념

을 가지고 40여 년 동안 노근리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땀 흘린 결과의 소산물이고, 정부와 국회로서는 어두운 과거사를 정리하고 인권회복과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를 만든 또 하나의 역사의 진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노근리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요구가 많아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같이 과거사 진상규명 흐름의 물꼬를 튼 것이 바로 노근리사건이었다.

한국 정부는 노근리사건특별법에 근거해서 노근리사건 문제를 인권과 평화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명예회복위원회에는 고 정은용 유족회장, 필자 등 생존 피해자와 유족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특별법의 집행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노근리사건특별법에 의거하여 첫 번째로 시행했던 일은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들에게 대해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사망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후유장애자 63명을 인정하여 총 226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그리고 유족수는 2,240명으로 확정 심의·의결했다.³⁾ 심의 결과 한국정부가 확인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수의 72%가 여성, 어린이, 노인일 정도로 노근리사건은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건임이 확인되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은 사건이 발생한 후 50여 년 만에야 이루어졌지만 한국정부가 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노근리사건의 실체와 희생자를 인정했다는 데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수십 년간 진상규명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해원(解冤)하고, 비록 늦었지만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3) 노근리사건 실제 희생자 수는 226명보다 훨씬 많다. 사건발생 55년 만에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생존 피해자 중 연세가 많았던 분들이 돌아가셔서 증언자 또는 인우보증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노근리사건의 주 피해마을인 주곡리와 임계리 마을 이외에 다른 곳에서 피난 온 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노근리사건특별법의 심사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고자 중 요건 미달로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근리사건 발생 직후 사건현장을 목격하고 보도한 조선인민보 보도를 보면 400명이 학살되었다는 기사도 있다.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 과정도 필자를 포함한 피해자 대표들이 깊이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노근리사건 현장일대 132,240㎡(약 4만여 평) 부지에 2006년도에 착공된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이 5년 만인 2011년 10월 말에 완공되었다. 노근리평화공원 내에는 사건현장인 노근리 쌍굴다리가 복원되어 과거의 기억을 방문자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노근리평화기념관과 인권·평화교육을 위한 교육관, 희생자 추모탑등도 건립되어있다.

노근리평화공원에는 2012년도에 국내외에서 5만여 명이 방문했으나, 2013년도에는 10만 6천여 명이 방문했고, 2018년도 연말까지 약 16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근리평화공원 전경 〉

7. 노근리사건의 핵심가치인 인권 및 평화증진을 위한 활동들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에 발맞추어 설립된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사장 정구도)’은 세계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미래의 인권 및 평화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근리사건 현장 등에서 매년 ‘세계대학생 노근리평화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2018년 8월, 제주

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제11회 평화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2008년 노근리평화상을 제정하여 국내외의 인권·평화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매년 시상해왔는데 2018년 10월에 제11회 시상식을 거행하여 노근리를 상징하는 핵심적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외에도 노근리 인권토론회 및 노근리 인권백일장대회, 노근리 평화취회대회 등 인권 및 평화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연중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세계 평화유지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UN군의 일원으로 한국군을 파병하고 있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측은 2012년에 향후 파병지에서 노근리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육군본부 군사연구소장에게 파병 한국 군인에게 노근리 사례를 사전에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었다. 그 결과 2012년에 육군본부 군사연구소가 발간한 ‘6.25와 민군작전’이라는 책 속에 노근리사건이 약 100페이지 분량으로 수록되었다.

무엇보다도 노근리사건의 핵심가치인 ‘인권 및 평화’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자 필자는 201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7차 INMP(International Network of Museums for Peace, 국제평화박물관네트워크)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했다. 또한 제8차 INMP 국제컨퍼런스의 한국 유치를 신청해서 유치에 성공했고, 수준 높은 학술행사가 되도록 3년간 열심히 준비한 끝에 2014년 9월,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전 세계의 35개국으로부터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제8차 INMP 국제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노근리사건 피해유족인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과 미국장로교단 산하 Cayuga-Syracuse 노회 측이 2년 가까이 협력한 끝에, 2016년 6월 25일에 개최된 미국장로교단 총회에서 미국 장로교단은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결의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상하원에게도 노근리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보상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낼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 결의에 따라 2017년, 미국 장로교단 허버트 벨슨 총서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 상하의장 앞으로 건의문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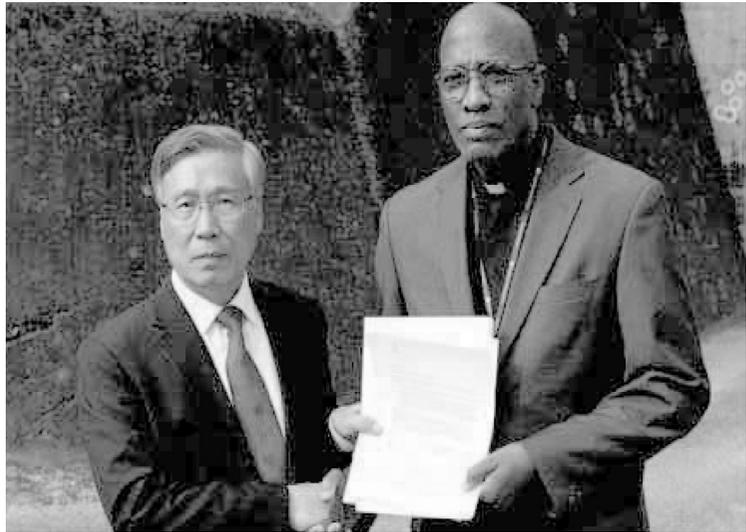
그리고 2017년 11월 초, 미국 장로교단 허버트 벨슨 총서기 등 17명의 목사들이 노근리평화공원을 방문해서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과하고, 함께 치유와 화해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공원 내 희생자 추모탑 앞에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한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식수도 했다. 이번 일을 통해 미국 장로교단은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사후조치 사업 무산으로 미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 것도 추진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작으나마 ‘인권회복’을 몸소 실천한 의미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노근리평화공원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0년이면 노근리사건 발생 70주년이 된다. 이에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2017년도 8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70주년 기념사업으로 “노근리 글로벌 평화포럼” 개최를 건의하였고, 그 결과 100대 국정과제 중 과거사 문제의 세부과제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시종 충청도지사에게 2020년 사건발생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노근리평화공원을 방문한 미국 장로교단 허버트 넬슨 총서기 (사진 우측)

‘노근리 국제 평화포럼 행사’ 개최를 건의하여 도지사 공약으로도 결정되었다.

2020년 70주년 기념행사인 “노근리 글로벌 평화포럼”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평화학자, 평화박물관 관장, 인권운동가들이 참석하여 노근리평화공원이 인권과 평화의 메카로 발전하는 큰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 나가며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노근리 사례는 보수와 진보 간 이념적 대립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반미라는 편견을 깨고 노근리 문제를 이념이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보게 하는데 나름의 기여를 했다. 또한 소수의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오랜 세월 헌신한 끝에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인류의 보편

적인 가치인 인권(생명권)의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을 세계 각국과 우리 국민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다.

한국전쟁 중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노근리사건 현장과 노근리평화공원을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인권의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場)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할 때 노근리사건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에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지표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8월 1일, 필자의 부친이자 오랜 동지로서 20여년을 동고동락했던 정은용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장이 별세했다. 국내 신문과 방송은 물론 미국의 AP 등 주요언론 특히 뉴욕타임스가 신문 한 페이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장문의 부고 기사를 보도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ABC뉴스는 가치 있는 일을 하시다가 2014년도에 돌아가신 분 67명을 선정했고, 그 중 대표적인 2분을 선정 보도했는데 필자의 부친이 뽑히셨다. 이는 아마 저희 선친



2007년 2월 필자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께서 반세기가 넘도록 고군분투하며 생명존중과 인권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사셨기에 이를 기리고 추모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기에 필자는 ‘인권회복과 평화증진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싶다.

필자의 모친은 현재 94세로 노근리사건 생존피해자들 중에 최고령 피해자 이신데 사건발생이 6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다. 이는 전쟁의 참혹함을 상기시키는 사례이자, 한반도에서 어떤 이유로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우리의 평화를 향해 가일층 노력해야 하며, 전쟁이 아닌 평화만이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는 2018년도 합동추모제에 주한 미 대사와 사건 당시 노근리사건을 일으켰던 미8군의 사령관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이는 노근리사건은 한국과 미국 간에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건전한 한미 관계의 유지 및 발전 그리고 인권증진에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근리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미 양국 국민 전체의 역사인식 문제이며, 나아가 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자 평화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금년 행사에 이 분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참석하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왜냐면 가해국인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들의 추모제 참석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을 단순히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국격(國格)을 높임은 물론 국내외에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문]

제주 4·3에 대한 미국 책임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기 위한 제언

백가운 (제주다크투어 공동대표)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4·3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일환으로 4·3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와 광화문 문화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4·3 평화기행 등 올해 진행된 다양한 사업들은 국내외에 제주 4·3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10만인 서명>이 마무리되면서 제주 4·3에 대한 미국 책임을 묻는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올 한 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제주 4·3에 대해 미국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된 문서를 찾기는 어려웠다. 특히 노근리 사건과는 다르게 실제 미국이 제주에 폭격을 가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주 4·3에 대한 미국 책임을 입증하고 실제 사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연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제주 4·3 및 미국 책임과 관련한 영문 자료 발행

제주 4·3은 7년 7개월의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인 만큼 사건의 복잡성과 복합성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도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한국 및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는 제주 4·3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과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담당자를 만나거나 외국 기자들을 만났을 때도 4·3의 미국 책임과 관련하여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비록 그 수는 많지 않더라도 4·3의 미국 책임과 관련한 학술 논문들은 발표된 것들이 있으나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영문 자료는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4·3 관련한 대중용 영문 자료로는 4·3 평화재단에서 발행한 “A Guide to the History of the Jeju 4·3 Incident(4·3 바로알기 영문판)”와 올해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발행한 “What is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4·3이 머우짜 영문판)”이 있다. 이 두 자료는 4·3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미국 책임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에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4·3에 대한 미국 책임의 이유를 설명하는 추가적인 자료가 영문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언론 및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노근리 사례에서 보듯이 제주 4·3에 대한 미국 책임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의 경우, 관련 자료를 찾아 내거나 문제를 파헤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 만큼 제주 4·3과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줄 미국 쪽 언론인과의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언론사에 4·3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제주 4·3을 꾸준히 알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주 4·3이 70년 전에 끝난 일이 아니라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국외, 특히 미국 언론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향후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쪽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한인 단체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로비나 언론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네트워크이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고 전 세계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전환기적 정의를 위한 국제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등과 같은 시민단체와 협력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도 향후 현지 로비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특별보고관

유엔은 오래 전부터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제 기준과 원칙들을 확립해왔다. 그 예로 주요 9개 국제 인권 조약¹⁾ 뿐만 아니라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피해자들의 구제와 보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불처벌(impunity)에 맞서는 행동들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원칙들’, ‘진실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 등을 들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국제 기준과 원칙들은 무엇보다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알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유엔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서 불처벌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를 위해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²⁾ 영어에는 “과거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를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라는 4가지 요소들로 표기하고 있다.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전문분야(과거사)의 인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긴급 청원이 들어온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해당 정부에게 서한

1)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2)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he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13 October 2011, A/HRC/RES/18/7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을 보내 인권 침해 여부 및 대응에 대해 질의한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에는 공식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국가가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 요청을 수락하면 특별보고관은 약 10여 일 동안 관련 정부 부처, 시민사회단체, 피해 당사자,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난 후 주제와 관련하여 해당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이 담긴 공식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제주 4·3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유엔 과거사 특별보고관에게 4·3 관련 청원을 제출하거나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과거사 활동을 해왔던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하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지난 2018년 6월부터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유엔에 가져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4·9평화통일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 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진실의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단위에서는 내년 상반기, 유엔 과거사 특별보고관을 한국에 비공식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초청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제주 4·3의 미국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유엔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문제를 유엔 및 미국에 가져간 사례

-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백남기 농민 사례 발표) - 스위스, 제네바



제주4·3 책임 규명을 위한 심포지엄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 2015년 핵확산방지조약 준비회의 (미국, 뉴욕/워싱턴)



● 2015년 유엔 자유권 심의 (스위스, 제네바)



(토론문)

미국의 책임을 규명을 위한 제주4·3유족회의 활동 방향 모색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미국은 제주4·3에 대한 주요 책임자이다.

제주4·3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책임자를 묻는다면 이승만대통령과 미군정을 꼽을 수 있다. 물론 현장 일선에서 직접 지휘했던 수뇌부들에게도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겠지만 상명하복을 우선 시하는 군, 경의 입장에서 보면 윗선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문형순서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장 책임자의 소신 있고 현명한 판단이 얼마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다. 무조건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민간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학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고의 책임자를 2명을 꼽으라면 이승만과 미군정을 꼽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도에 제주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여기에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과거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자를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대한민국의 과거사 처리 방식에서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시행한 곳은 전무하다. 이에 유족회에서는 4·3특별법을 개정하는 초안을 마련하면서 책임자 조사 및 처벌 규정을 넣으려고 했으나 법률가 및 전문가 분들이 개정안이 국회



제주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실익도 없는 책임자 처벌 규정은 빼는 것이 현명하다고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도 책임자 처벌 규정은 빠지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주4·3의 정의를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¹⁾ 개정안의 제주4·3 정의에서 미군정 시기에 발생한 사건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묻는 내용이 들어 있다. 향후 4·3특별법이 개정되면 미국에 대한 책임 규명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명분을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다.

2. 제주4·3희생자유족회 미국책임규명을 위한 활동

유족회에서 미국에 책임 규명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6년 미국을 방문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세계섬학회 고창훈교수로부터 제안을 받고 천주교제주교구회와 시민단체 등이 미상원의원실에 청원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2016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다. 다음은 2016년 방문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제주4·3 배상문제와 화해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9월 8일과 9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비콘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 양영수 제주교구 신부,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고창훈 제주대 교수(세계섬학회장), 허상수 제주섬학회 화해와 치유위원장을 비롯해 구니히코 요시다(kunihiko yoshida) 홋카이도 대학 교수, 나츠키 사이토(Natsu Saito) 조지아 주립대학 교수, 엘 브로피(AI Brophy) 노스캐

1) 현행 제주4·3특별법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권은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도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롤라이나 대학 교수, 칼툰 워터하우스(Carlton Waterhouse) 인디애나대학 교수, 호프 메이(Hope Elizabeth May) 중앙미시간대학 교수. 미국에 거주하는 4·3유족, 언론인 팀 설록(Tim shorrock)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제주4·3을 다룬 교과서를 제작중인 뉴해이븐의 맥스 코만도(Max comando), 크리스 브리난(Chris Brennan) 교사들도 참여해 4·3 관련 교과서 준비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강우일 주교는 “화해를 통해 진실한 제주4·3의 비극을 해결하고 아시아의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4·3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미국의 지도자들도 잊혀진 4·3사건에 대해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문제에 대한 배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니히코 요시다 교수는 배상 문제와 관련해 “비극적인 제주4·3에 대해 미국 역시 연관되어 있는만큼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미국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츠키 사이토(Natsu Saito) 교수는 “미국정부의 사과나 배상을 이끌어 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미군정 시대였던 4·3 문제에 대해 미국이 왜 책임져야 하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는지 프레임을 잘 설정하고 국제법적 해결방안과 함께 정치적 대응운동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칼톤 워터하우스 교수는 “미국 정부가 당시 무엇을 했는지, 등에 대한 열린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4·3 당시 사회적 희생에 대한 미국정부 조사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5만9000명의 제주4·3희생자 유족들을 대신해서 미국까지 오게됐다”면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을 제외한 가장 큰 희생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정부가 화해의 관점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4·3 교과서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맥스 코만도(Max comando) 크리스 브리난(Chris Brennan) 교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제주4·3커리큘럼 준비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맥스 코만도 교사는 “9학년 세계 역사 시간 중 제노사이드의 이해라는 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제주 4·3의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노사이드 이후 어떻게 사회가 화해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가지고 레슨 11까지의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 양성주 4·3유족회 사무처장, 고창훈 세계섬학회장, 양영수 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강호진 제주민자치연대 대표 등은 9일 미국 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4·3유족회원 등 6000여명으로부터 직접 받은 서명부를 제주 현지서 미국까지 직접 챙겨서 왔으며 비극적인 4·3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듬해 2017년 5월 21부터 5월 26일까지 미국을 재차 방문하였다. 재방문에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4·3증언회를 개최하였고 미국 백악관 앞에서 미국의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는 것에 이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두 번의 미국 방문을 통해 민간인 단체로 미국책임 규명 활동하는 것이 엄청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두 번의 방문을 통해 성과 및 과제를 정리하였다.

■ 미국 방문의 성과

- 제주 4·3 발발 69주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 앞에서 미국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민간차원의 활동을 펼친 것은 의미가 큼
- 미국 현지에서 4·3 당시 증언자와 함께 4·3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성과임
- 4·3유족회만이 아니라 제주지역 시민단체 및 학자들이 공동으로 미국에 대해 책임규명 및 사과를 받기 위한 공동보조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지역 언론 등의 동행취재 등을 통해서 미국 활동에 대한 기록을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성과임
- 통역, 백악관 집회 등 현지 미국 거주 제주인들의 자원활동을 통해서 세부적인 미국 방문 일정이 큰 차질을 빚지 않은 것도 작은 성과임

■ 향후 과제

- 민간차원의 독자적인 활동만으로는 미국 등 국제활동에 대한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 국회, 도,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활동 방식 전환 필요하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정부에 진상규명 및 사과를 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특히 미국 현지 한인, NGO 그룹,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등을 통한 규모 있는 국제 활동이 필요함
- 학술 활동과 관련해서도 당초 계획이 다소 어긋난 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하며, 4·3 관련 국제적인 연구자 등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현지 외국 언론과의 소통도 필요함, 특히 미국에서 4·3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뉴헤이븐 교사들이 참여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움
- 세부적인 숙소, 행사장 관련 동선 사전 세밀한 파악 등을 통해서 현지에서 혼선이 없도록 준비 철저가 필요함
- 통역 및 자원봉사에 대한 실 경비 지원을 예산에 포함해야 함
- 증언자로 오신 연로한 유족이 너무 빠듯한 일정으로 소화하기 힘들. 여유 있는 일정 필요

두 번의 미국 방문 이후 지금과 같은 방식의 미국 방문은 큰 의미를 둘 수 없겠다는 평가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미국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판단에 따라 제주도청과 도의회, 제주4·3평화재단에 4·3에 대한 미국 책임 규명 활동을 제안하였으나 쉽게 미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회는 2018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미국에 대한 활동은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유족회 내부에 미국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연대포럼을 구성하여 외부인사를 모시고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올 해 제주4·3평화재단에서 조사연구실을 만들면서 미국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평화재단에서 좀 더 수준 높은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유족회에서는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하면서 2017년 3월 제3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책임을 묻고 10만인 서명을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후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 제70주년범국민위원회에서도 서명 운동을 같이 동참하였고 지난 10월 31일 광화문에서 전달식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고 미국 대사관에 11만 명이 서명한 서명용지를 전달하였다.

3. 노근리 사건을 통해 배우는 미국의 책임 규명

제주4·3이 미군정 시기에 겹치는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노근리는 한국전쟁 외중에 미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임에도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정구도 이사장과 부친께서 피나는 노력이 있어서 그나마 미국 정부의 유감 표명이라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노근리에서 책임 규명 활동을 하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언론과 종교의 힘이라 해도 될 것이다. 물론 유가족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1999년 AP통신이 집중 보도하면서 미국 내에서 여론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한미 양국이 진상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종교 단체의 양심적 행동들이 모여 미국사회를 움직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근리 사건 발생 50년 만에 미국 정부 클린턴 대통령이 노근리사건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유감표명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유감 표명은 정말 피나는 투쟁의 결과물이라 하지만 너무 아쉽다. 향후 미국 정부에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다른 과거사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이유이다. 제주 4·3이 미국책임 규명활동은 더욱 많은 준비를 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4. 미국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유족회 미국 방문을 두 차례 주관했던 고창훈교수는 미국이 과거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일본인 강제이주 사건뿐이라고 주장한다. 유일한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 사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1942년 2월 특정 군사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3년 동안 격리했던 사건인데 이는 1988년 레이건 대통령 때 수용자 중 살아남은 이들에 대해 2만 불을 보상해준 것이다.²⁾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계이긴 하지만 미국시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것이라 제주4·3이 모델을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정부에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 외국정부에 어떤 사과나 배상을 한 사례가 없어서 그나마 접근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2만불 배상 사례 적용은 불편하다. 사례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미국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활동을 우선 시 해야 할 것이며 배상금에 대한 거론은 유족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유족과 논의 없이 배상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다.

그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노근리에서 배우는 것이 좋겠다. 우선 외신기자를 통한 4·3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양심 있는 종교계를 설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고 표를 의식한 미국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70주년을 맞아 외신기자를 초청해서 4·3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한 번의 투어로 될 일은 아니지만 거듭 진상을 알리는 프로그램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격리수용 사건이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자 미국정부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일본인을 부정직하고 사악하여, 열등한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반일 감정이 분노와 증오로 폭발하기 시작하자 1942년 2월 루스벨트 대통령은 포고령 제9066을 발동하여 특정군사시설에 살고 있는 민간인을 격리시킨다는 명문으로 일본인 12만 명에 대한 강제 격리를 시행하였다. 이후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2만달러를 보상하는 법령에 서명한 사건이다.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	--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dotted lines.

| 제주4·3 책임 규명을 위한 심포지엄 |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handwritten notes or a transcript.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Empty rectangular box for notes or a title.

Main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